

(표지 : 서울시 노동정책 토론회)

프로그램

■ 개회식 14:00~14:10

- 인사말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제1부. 현장을 옮겨온다 : 일하는 시민의 '뭉'소리 14:10~14:45

- 봉제노동자들의 '뭉'소리 이정기 화학섬유노조 봉제인지회장
-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뭉'소리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라이더의 '뭉'소리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부 준비위원장
- 방송작가의 '뭉'소리 김순미 방송작가유니온 사무국장
- 타투노동자의 '뭉'소리 김도윤 화섬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
- 여성 노동자의 '뭉'소리 박지혜 정의당 중앙대의원
- 빈곤층·홀리스의 '뭉'소리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휴식 14:45~15:00

■ 제2부. 정책을 세운다 15:00~16:30

- 좌장 | 공군자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발제 | 2022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패널토론1 |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 패널토론2 |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패널토론3 |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 패널토론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패널토론5 |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

목 차

■ 발제문

- 2022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5
 - 서울 시민·노동자 1천 명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문

- 토론1 | 너머서울 서울시 노동정책 토론회 토론문 43
 -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 토론2 | '노동존중특별시'의 너머로 가기 위한 과제 49
 -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 토론3 | 노조 밖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노동정책과 노동조합 55
 -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 토론4 | '자영업의 위기와 일자리 사회안전망' 63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5 | 사각지대 동네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제안 71
 -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 부록

- 서울시민·노동자 노동현안 및 정책 의견 조사 설문지 77

발제문

2022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 제 문

2022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 서울 시민·노동자 1천명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 코로나19와 노동상황

□ 코로나19와 노동시장 고용 다변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및 격차, 불평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자본과 기업의 이윤 중심의 경영전략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고용 다변화’ 및 ‘파편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 비정규직 중심(직고-간고)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로 전환(규모 동일)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ILO와 OECD는 향후 코로나19 이후 불평등과 피해가 심각한 집단으로 ‘자영업’, ‘비정규직’, ‘청년’, ‘여성’을 꼽고 있음.¹⁾
 - 우리는 특수고용(165만명), 플랫폼노동(179만명), 프리랜서(400만명)와 같은 744만명이 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의 밖에 놓인 노동자들이며, 법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진 존재들임.
- 그렇다고 기존 노동자들이 모두 법제도의 보호나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약 945만명이 넘는 사각지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간접고용(80만명), 일용직(141만명), 초단시간(185만명), 5인 미만 사업장(378만명), 고령(142만명), 청소년(19만명)은 법의 예외

* 이 자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지역 ‘노동+사회안전망’ 정책팀에서 작성한 과제안(2021.9)과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 설문조사(2021.11) 결과를 필자가 재구성 추가 보완한 것임을 밝힘.

1) ILO, OECD(2020),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jobs and incomes in G20 economies

나 권리의 부재로 제도적 차별이 용인됨.

-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 및 사각지대 노동자까지 1689만명이나 됨. 자본주의 이윤의 향유 앞에 부차적 권리만 보장받는 것임.

○ 서울지역 경제활동인구 내 취업자 분포의 변화는 임금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와 비임금노동자(고용사용주와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사실상 노동자로 구분되어야 할 비전형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 서울지역 비임금노동자 중 비전형 노동자로 구분되는 인원은 1,089,991명에서 2018년 1,505,112명으로 약 45만명 이상 증가했음. 특히 비전형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는 40만2천명이고, 플랫폼노동자는 47만명, 프리랜서는 52만6천명으로 추정됨(김종진, 2020)

[표 1-1] 전국 및 서울 비임금노동자, 사업소득자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규모

구분	정부 통계 '비임금 노동자' 규모 분석			규모 추계 조사 자료 서울시 규모 추정	
	취업자 중 비임금노동자	취업자 중 사업소득자	취업자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전국 규모	681만명	613만명	400만명	165만명	179만명
서울 규모	91만6천명 (13.4%)	150만5천명 (24.55%)	52만6천명 (13.1%)	40만2천명 (18.2%)	47만명 (25.8%)
조사 시기	2018	2018	2018	2018	2020

자료: 김종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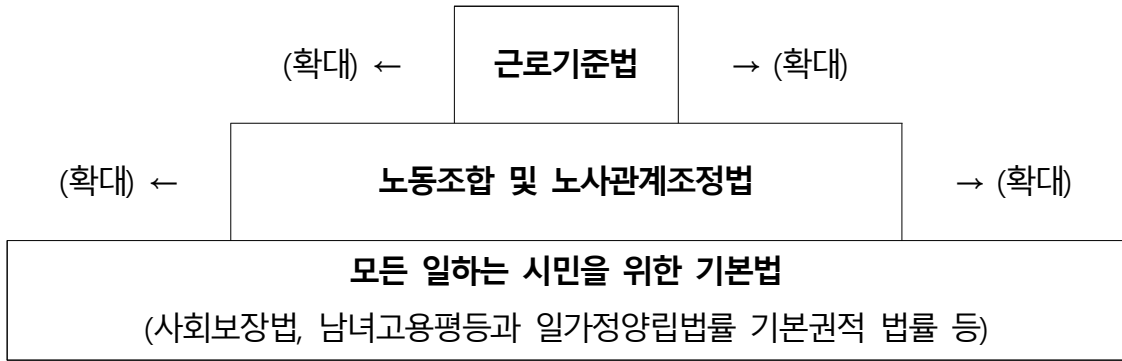
○ 이는 전통적인 기존 노사관계 쟁점은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상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노동문제('일하는 사람/시민' 제도 보호의 필요성)로 확대되고 있는 것임.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매우 협소하게 정의함.

- 이런 이유로 최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 논의가 힘을 받고 있음. 기존 법체계는 다양한 기준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을 법체계에서 배제해 왔음. 이 때문에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시민은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세워진 새로운 노동체제에서의 규칙들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상상력이 필요함 시점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산안문제는 육체적 문제(죽지 않을 권리: 위험의 외주화, 위험·위해)와 정신적 문제(정신건강: 괴롭힘, 감정노동, 트라우마 등)로 확산

될 개연성이 높음. 특히 비임금노동자 영역은 업무 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따라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함.

[그림1-1] 새로운 노동체제와 일하는 시민 기본법의 모형



□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정의로운 전환 문제

-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독일의 산업4.0이 진화된 『산업5.0 Industry 5.0』 시대를 대비하는 자료가 발표됨.²⁾ 이들은 향후 지속가능성, 인간중심성, 탄력성 이라는 3요소를 인더스트리 5.0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인더스트리 5.0’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는 기술발전 과정에서 철저한 인간 중심으로 초점을 전환해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향후 생산과정 중심에 노동자가 있으며,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사회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노동자 안전 및 작업 환경, 교육·숙련 형성, 인권 존중 및 기술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평생학습사회 시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교육훈련과 일터의 치명적 사고와 비치명적 사고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음.
- 2015 파리협약 이후 탄소중립(기후변화&위기) 흐름에서, 산업 및 노동전환 문제(정의로운 전환)가 주요 노사관계의 이슈로 대두될 것임. 정부에서는 이미 '21년 7월 산업전환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을 제정했음.
 - 향후 노사관계는 거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산업·지역과 같은 중범위 수준과 기업·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 차원에서도 의제화될 것(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으로 추정됨. 이미 주요 산별 노조(21년 대대 결의, 사업계획) 및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정의로운전환네트워크)가 꾸려

2) European Commission(2021) Towards a sustainable, human-centric and resilient European industry,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January 2021).

지고 있고, 향후 기후위기와 노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 노동자 vs. 소상공인 대립 구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 사업장 규모별 노동기본권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사용자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대립시키는 구도로 제도가 설계되어 왔음. 이는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휴일 제도화 등 계기를 통해 반복 재생산되고 있음.
- 헌법 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정부·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취약하거나 사용자가 불분명한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복지, 사회보험, 건강권 등을 기업단위를 넘어 전국 및 지역 수준의 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도출

- 이 글은 국내 최초로 지역 차원의 노동정책 문제를 위해 ‘시민과 노동자’ 대상 인식조사 (2021.11)³⁾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서울시민 1천명이 생각하는 노동문제는 두 개 영역의 65개 문항(고용노동 전반의 가치관 인식 34개,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및 방향 31개)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했음.

1. 노동문제 인식/가치관(34개 문항)	2. 노동정책 평가/방향(31개)
1.1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심각성(10개)	2.1 지방정부 노동정책 수립/시행 필요성
1.2 노동자 관련 인식(9개)	2.2 현재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1.3 노동조합 관련 인식(6개)	2.3 지난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1.4 노동에 대한 인식(6개)	2.4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12개)
1.5 노동권 관련 인식(3개)	2.5 서울시 노동정책 중요성 평가(11개)
	2.6 서울시 노동정책 분야별 과제 중요성 평가(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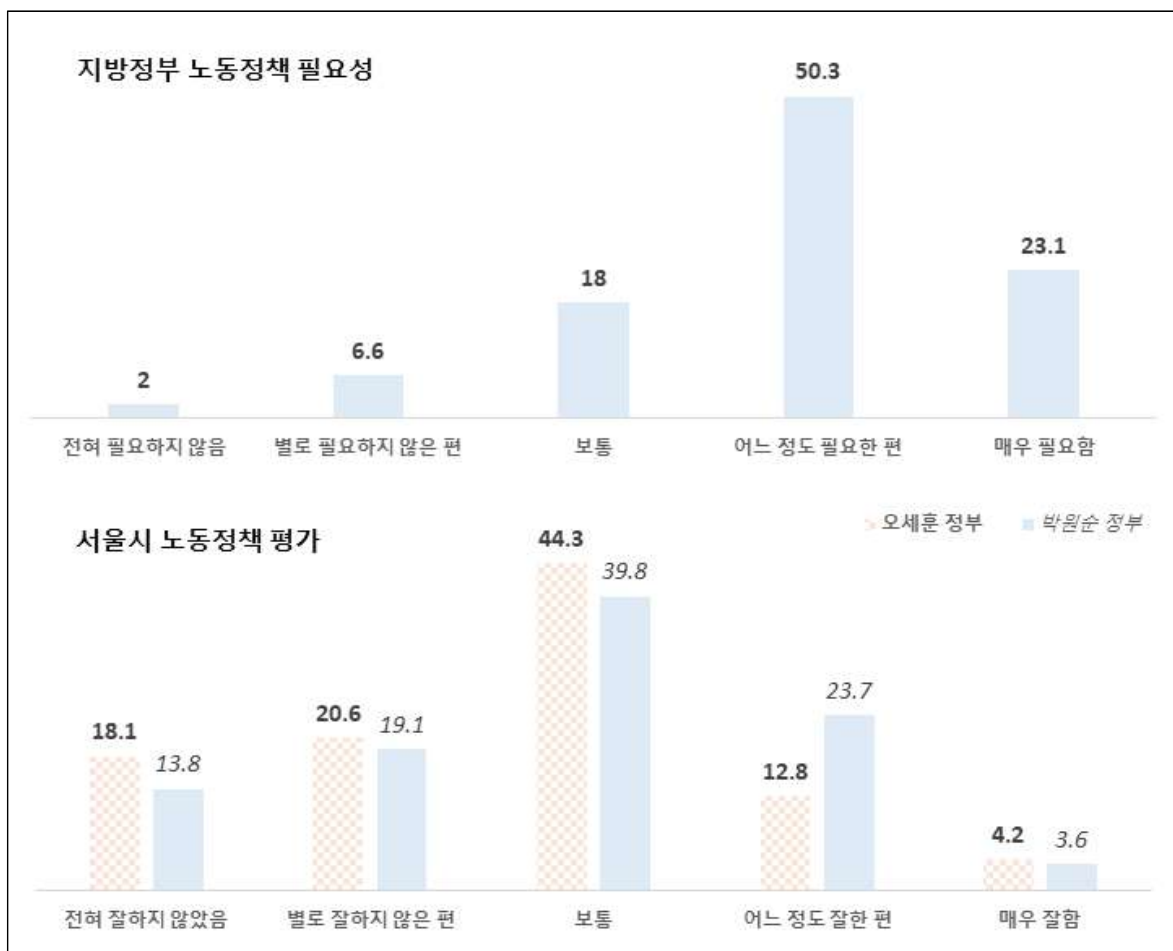
3) 이 조사는 서울시민 대상 노동문제 및 가치관 인식조사이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꾸려진 “너머서울 노동+사회안전망” 정책팀에서 기획 실시한 것임. 서울시민 노동문제 관련 인식조사는 엠브레인에서 약 1주일간(온라인: 2021.11.17.~2021.11.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 진행되었음. 조사 표본은 서울시민 만 19세부터 60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서울지역의 인구센서스 분포(성별, 연령별, 권역별)를 비례배분하여 진행되었음. 조사 표본 여성 50.8%(남성 49.2%), 청년(19-34세 35.5%, 55세 이상 고령 11.4%), 임금노동자 62.9%,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 등 불안정노동자 11.5%, 비임금노동자(고용, 자영업자 등) 9%, 학생 및 주부 등 비경제활동자 16.6%였음(미혼 49.3%). 노동 및 사업장 속성은 평균 근속기간 77개월, 사무직 40.2%, 30인 미만 46%(5인 미만 22.3%, 300인 이상 민간 21.2%), 월 평균 임금/소득 200 미만 25.1%, 노조 조합원 8.1%이었음.

II. 서울시민 1천 명의 노동 가치관 및 정책 인식과 지향

□ 서울시민·노동자 노동정책 필요성, 평가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은 지방정부 노동정책 필요성(73.8%)이 크다고 답했고, 서울시 노동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오세훈 시장 시기 노동정책은 17%(보통 44.3%), 박원순 시장 시기 노동정책은 27.3%(보통 39.8%)였음.

[그림2-1] 지방정부 노동정책 필요성 및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단위: %)



가. 중앙만이 아닌 지방정부 노동정책 필요성

* 필요 73.4%(어느 정도 50.3%, 매우 23.1%), 필요하지 않음 8.6%(전혀 2%, 별로 6.6%), 보통 18%

나. 박원순 시장 시기 노동정책 평가

* 잘한 편 27.3%(어느 정도 23.7%, 매우 3.6%), 잘하지 않음 32.9%(전혀 13.8%, 별로 19.1%), 보통 39.8%

다. 오세훈 시장 시기 노동정책 평가

* 잘한 편 17.0%(어느 정도 12.8%, 매우 4.2%), 잘하지 않음 38.7%(전혀 18.1%, 별로 20.6%), 보통 44.3%

[표 2-1] 서울시민의 노동정책 필요성 및 평가(단위: %)⁴⁾

	불필요 못함	필요 잘함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지방정부 노동정책 수립/시행 필요성	8.6	73.4	3.86	3.89	3.89	3.86	3.79
現 오세훈 시장,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38.7	17.0	2.64	2.58	2.64	2.61	2.63
前 박원순 시장,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32.9	27.3	2.84	2.83	2.68	2.86	2.92

□ 서울시민·노동자 노동정책 항목별 평가

[표 2-2] 서울시민의 노동정책 각 항목별 평가(단위: %)

	[부정 적]	[긍정 적]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 노동 자	불안 정 노동 자
서울시 청소·경비·시설·콜센터 등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	14.3	60.4	3.60	3.70	3.54	3.60	3.55
교통, 주거, 기초 생활을 위해 저임금노동자 대상 공 공부문 생활임금제도 시행	8.2	63.1	3.74	3.76	3.68	3.74	3.70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홍보,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 수립	4.5	73.1	3.96	4.06	3.96	3.95	3.81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에 직원 대표 1-2인이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 운영	11.6	<u>43.2</u>	3.38	3.43	3.35	3.39	3.34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동일 업무 수행 남성과 여 성의 임금격차 확인을 위한 성별임금 공시제 운영	13.5	<u>55.3</u>	3.57	3.89	3.60	3.60	3.37
서울지역의 광역/권역/구별 노동센터와 쉼터 설치· 운영 통한 법률상담, 교육, 문화 등 지원과 실태조사	5.2	62.6	3.76	3.90	3.81	3.76	3.71
서울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 층 대상 유급병가 지원(최대 14일) 제도	7.0	68.2	3.84	3.88	3.84	3.82	3.93
서울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 층 대상 휴가비 지원(최대 1박2일) 제도	11.4	57.1	3.64	3.67	3.62	3.62	3.71
서울지역 다양한 취약 및 사각지대 정기적 실태조사 (청소경비, 배달, 택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특수 고용 등)	5.9	69.1	3.88	3.94	3.91	3.87	3.92
서울지역 노동자, 사용자 등 다양한 노동교육 시행	6.1	61.5	3.73	3.80	3.75	3.72	3.63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 부서 설치 와 운영 통한 행정 조직 기반 마련 및 확대	5.7	61.1	3.72	3.75	3.74	3.69	3.70
서울시 노동, 여성, 청년, 돌봄 등 취약층 및 일하는 시민 대상 민간위탁 시설·센터의 확대 강화	6.1	66.2	3.81	3.97	3.79	3.85	3.58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은 서울시의 분야별 노동정책 평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영참
여 모델(노동이사제 3.38점)과 성평등임금공시제(3.57점) 항목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았으나 대부분 '긍정' 평가가 60% 이상으로 나타남.

4) 오세훈 시장 노동정책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41.7%, 잘했다는 의견은 주부/학생
등 비경제활동시민 18.7%/20대 청년과 50대 이상에서 상대적 높은 지지)였고, 박원순 시장 노동정책 잘 못했
다는 의견은 "비경제활동(주부/학생 등 41%, 잘했다는 의견은 비임금노동자 40%/40-50대 상대적 높은 지지)였음.

- 대표적으로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홍보,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 수립’(73.1%, 3.96점) ‘서울지역 다양한 취약 및 사각지대 정기적 실태조사’(69.1%, 3.88점), ‘서울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층 대상 유급병가 지원’(68.2%, 3.84 점) 등에 대해 ‘긍정적’이었음.

□ 서울시민·노동자 고용의 질 인식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에게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남용 문제’(75.4%, 3.96점),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71.8%, 3.89점), ‘산업해재 및 노동안전보건 미흡 문제’(67.7%, 3.88점) 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44.9%, 3.41점),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미흡과 부족’(45.9%, 3.45점) 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4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3] 서울시민의 고용의 질(decent work) 지표 인식(단위: %)

	[심각하지 않음]	[심각함]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과 고용 문제	5.3	73.2	3.86	3.91	3.86	3.86	3.70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5.6	71.8	3.89	3.97	3.81	3.95	3.84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미흡과 부족	10.0	<u>45.9</u>	3.45	3.46	3.39	3.47	3.37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남용 문제	5.6	75.4	3.96	4.02	3.93	3.97	3.84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	7.8	64.3	3.77	3.85	3.91	3.79	3.76
산업해재 및 노동안전 보건 미흡 문제	5.2	67.7	3.88	3.98	3.90	3.86	3.89
연령, 성별 등 일터에서의 차별 문제	12.1	51.0	3.53	3.80	3.62	3.51	3.48
육아출산 및 돌봄 등 부족과 사각지대 문제	8.4	68.5	3.83	4.10	3.95	3.85	3.63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	12.3	<u>44.9</u>	3.41	3.50	3.45	3.36	3.54
일터에서의 노동자 권리 및 목소리 반영, 대변 부족 문제	6.7	56.9	3.65	3.74	3.72	3.67	3.66

* 주 : 해당 문항은 5점 척도(매우 심각, 심각, 보통,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 서울시민, 노동자 권리 보장 필요성 인식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에게 노동자 권리보장 관련 의견들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80% 수준 이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 중에서 ‘모든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91.9%, 4.50점),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91.3%, 4.46점) 등에서 90% 이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4] 서울시민의 노동 권리보장 인식(단위: %)

	[아니다]	[그렇다]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노동자	불안정노동자
모든 노동자는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 여부·연령·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5.4	80.6	4.11	4.22	4.21	4.16	3.94
모든 노동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2.2	89.9	4.36	4.47	4.48	4.41	4.16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2.7	87.2	4.31	4.38	4.42	4.38	4.20
모든 노동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지켜져야 한다.	3.4	84.2	4.25	4.37	4.36	4.31	4.09
모든 노동자는 적절한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5	87.3	4.34	4.44	4.46	4.42	4.21
모든 여성노동자는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아야 한다.	4.1	78.5	4.13	4.33	4.16	4.21	3.84
모든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4.0	81.8	4.19	4.31	4.14	4.28	3.94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1.3	91.3	4.46	4.59	4.49	4.50	4.26
모든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1.1	91.9	4.50	4.63	4.53	4.52	4.35

□ 서울시민·노동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정책 인식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에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간 수준의 동의(50%) 수준에 그쳤음.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75.1%, 4.06점),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해당 관청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74.9%, 3.99점) 의견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50.8%, 3.50점),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 수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57.7%, 3.66점) 의견은 50%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5] 서울시민의 노동권, 집단적 노동문제 인식(단위: %)

	[아니 대]	[그렇 다]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 노동 자	불안 정 노동 자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6.9	68.2	3.85	3.95	3.88	3.92	3.63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현재 12.5%)은 더 높아져야 한다.	10.3	<u>57.7</u>	3.66	3.75	3.67	3.73	3.57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6.8	69.6	3.85	3.98	3.86	3.90	3.63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14.7	<u>50.8</u>	3.50	3.64	3.64	3.54	3.40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쟁의행위 포함), 해당 관청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6.2	74.9	3.99	4.15	4.04	4.05	3.77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4.6	75.1	4.06	4.17	4.09	4.12	3.90

□ 서울시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향상 인식

[표 2-6] 서울시민의 노동기본권 향상 인식(단위: %)

	[아니 대]	[그렇 다]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 노동 자	불안 정 노동 자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1	88.5	4.31	4.41	4.35	4.34	4.19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3	86.7	4.26	4.38	4.29	4.31	4.09
현재 초중고 교과과정에 포함된 노동기본권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3.5	74.3	4.04	4.15	4.13	4.07	3.94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6	78.6	4.10	4.16	4.15	4.13	4.08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및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분배를 받아야 한다.	7.9	75.5	4.02	4.11	4.10	4.04	3.90
국가는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3	79.2	4.13	4.25	4.14	4.16	3.94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에게 노동기본권 향상 관련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0%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중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88.5%, 4.31점),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86.7%, 4.26점) 등의 의견에 ‘그렇다’는 동의 응답이 8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민, 노동자의 서울시 정책 방향 인식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에게 서울시 정책과 관련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0%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중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88.5%),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86.7%) 등의 의견에 ‘그렇다’는 동의 응답이 8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 일하는 시민

	[아니 대]	[그렇 대]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 노동 자	불안 정 노동 자
서울시 조례와 정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4.2	77.8	4.04	4.14	4.08	4.03	4.11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절한 임금·소득과 휴식, 사회보험 및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1.9	84.6	4.24	4.32	4.31	4.26	4.22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2.6	82.3	4.13	4.14	4.24	4.15	4.09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에게 <서울시 노동정책 의제별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산업안전 예방 등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지원’(79.6%, 4.12점), ‘아프면 쉬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정책’(78.3%, 4.11점)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8] 서울시 노동정책 중요성- 정책의제(단위: %)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함]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 노동 자	불안 정 노동 자
저임금·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과 취약층의 노동기본권 확대	3.5	74.9	4.00	4.06	3.98	4.03	3.98
아프면 쉬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유급병가·상병수당 지원)	3.2	78.3	4.11	4.20	4.19	4.18	3.97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의 사회보험 지원(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3.9	74.1	4.02	4.11	4.03	4.04	4.13
저임금·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취약층의 노동복지 지원 위한 기금 설치·운영	5.8	<u>65.0</u>	3.81	3.87	3.79	3.82	3.73
재난안전 및 감염병 시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2.7	75.2	4.02	4.10	4.05	4.03	3.97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산업안전 예방 등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지원	2.3	79.6	4.12	4.22	4.19	4.15	4.00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맞는 고용노동정책 수립	5.6	<u>67.0</u>	3.87	4.04	3.95	3.90	3.78
디지털 전환 및 고령화 사회 등 대비하기 위한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2.2	74.4	4.00	4.12	4.05	4.01	3.98
지역 차원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조성 위한 고용정책 수립	2.8	74.2	4.01	4.12	3.92	4.02	3.91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노동 전담 조직 운영과 정책 수립	7.0	<u>63.6</u>	3.77	3.77	3.83	3.78	3.70
서울시 노동, 여성, 청년, 돌봄 등 취약층 및 일하는 시민 대상 민간위탁 시설·센터의 확대 강화	6.4	69.9	3.91	4.11	3.93	3.95	3.70

○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에게 <서울시 노동정책 대상분야별 과제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중에서 ‘고령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제공’(80.3%, 4.12점), ‘청소년·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77.0%, 4.06점)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인권이 보장된 환경’(59.3%, 3.66점)에 대한 응답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9] 서울시 노동정책 중요성 - 부문대상(단위: %)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함]	[5점 평균]	여성	청년	임금 노동 자	불안 정 노동 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일과 삶이 조화된 일터 만들기	6.5	72.5	3.97	4.27	4.06	3.98	3.80
청소년·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3.6	77.0	4.06	4.18	4.08	4.07	3.90
고령노동자의 노후 대비와 퇴직 이후 건강한 일자리 제공	2.2	80.3	4.12	4.24	4.12	4.14	4.07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등 일자리 제공과 노동기본권 보호	3.0	73.6	4.03	4.07	4.02	4.05	3.91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인권이 보장된 환경	10.4	<u>59.3</u>	3.66	3.73	3.57	3.68	3.54

Ⅲ. 서울지역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사회안전망 정책과제(안)

- 코로나19의 경험과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의 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운동의 전략과 방향 속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의 경우 주요 업종과 개별 사업장의 현안은 산업별 혹은 집단교섭 등의 형태를 통해 기존 노사관계 틀을 확장·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지방정부(광역-기초)에서 서울지역 조직 및 미조직 사업장 및 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임.
- 2022년 주요 정책은 3개 영역(기본권향상 및 사각지대, 노동복지기금과 연대, 좋은 일자리), 9개 정책과제 그리고 부문 대상별(장애인, 빈곤층, 홈리스, 여성) 과제를 제시함.

[표 3-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영역과 과제들(논의안)

3개 영역	9개 과제	입법 법률	자치 법규	기존 정책	운영 기구	시행 단계	21년 서울시민 설문조사
일하는 시민 기본권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	1.1 영세, 취약층 기본권 확대	-	노동기본조례개정 必	2차 노동정책 확대 적용	노동센터 기타?	22-24년 단기	74.9%
	1.2 상병수당·유급병가 적용 및 확대	건강보험 50조 근기법 60조 개정 必	서울형 유급병가 개정 必	서울시 유급병가 확대 * 21 시범사업 진행	서울시 공공보건 의료재단	22-24년 단기	78.3%
	1.3 취약층 사회보험 지원	개정(有)	노동기본조례개정 必	2차 노동정책 확대 적용 *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센터 기타?	22-24년 단기	74.1%
일하는 시민 노동복지, 연대 기금	2.1 취약층 노동복지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노동기본조례개정 必	2차 노동정책 확대 적용	無	22-24년 단기	65.0%
	2.2 재난안전 취약층 지원	재난안전기본법 감염 및 예방 법률	노동기본조례개정 必	2차 노동정책 확대 적용	無	22-24년 단기	75.2%
	2.3 노동안전 및 건강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보건조례	1차 노안 기본정책 확대 적용	無	22-24년 단기	79.6%
일하는 시민 좋은 일자리	3.1 정의로운 전환 - 기후·녹색일자리 등	탄소중립기본법	無	2차 노동정책 확대 적용 * 산업 및 노동전환 * 탄소중립 시나리오(8.5)	無	22년-27년 중기	67.0%
	3.2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일자리조례 검토	2차 노동정책 확대 적용 일자리정책 *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일자리센터 개편	22년-24년 중기	74.2%
	3.3 기술교육 및 숙련형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노동기본조례개정 必 일자리조례 검토	2차 노동정책 확대 적용 일자리정책 * 고용 및 일자리 정책	기술교육원 50플러스 재단 여성**센터 개편	22년-27년 중기	74.4%

* 주 : 1) 지방정부 행정조직 편제상 타부서와 조율조정 필요 정책, 사업 존재
 2) 서울시 이외 25개 자치구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위탁 연계 검토
 3) 2.3의 노동안전 및 건강 지원 세부 내용은 향후 추가 예정.

[영역1] 과제 1-1. 일하는 시민(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 정책·운동 목표 : 일하는 시민으로 노동기본권 보호 대상 확대와 예방적 차원의 근로감독 행정 확장

- (핵심 내용) ‘노동자’를 모든 일하는 시민으로 확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
- (정책 현황)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로 서울시 노동정책 대상은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여 체계적인 정책발굴과 집행을 갖춰야 함.

□ 정책 현황 (문제점)

- 현행 노동관계법은 고용-피고용이 특정되어야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 노동기본권이 선택적으로 작동해 사각지대를 광범위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키우고 있음.
- ‘서울시 노동기본조례’는 노동자를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임금’은 임금근로자를 전제로 실업 및 구직자가 미포함 될 수 있어 ‘일하는 사람/시민’ 대상의 포괄적 접근 필요
- 민간위탁을 통해서 노동법 권리구제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범위반 근절 효과는 미미함.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한의 이양 혹은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대폭 확대·강화함으로써 예방적 근로감독 행정 확장이 필요함.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2022년 ‘서울시 노동기본조례’를 개정하고 다른 조례와 자치구 조례 개정을 추진함.
- 2022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 확장을 위한 서울시-노동청 업무협약 체결/시범 운영 공조

[개정 법률]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2항 4호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삭제

[개정 조례]

* 「노동기본조례」 제15조(노동조사관) 민간부문까지 역할 확장을 위한 개정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근로감독권에 관한 해석 논쟁과 그에 따른 법률 해석
- 노동조사관 신설에 따른 예산과 관리 문제

[영역1] 과제 1-2. 상병수당·유급병가 적용 및 확대

□ 정책·운동 목표 : 일하는 시민으로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핵심 내용)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중앙)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화 (서울)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기준 완화와 적용대상 확대
- (정책 현황)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질병유급병가 미국과 한국이 유일 부재. (중앙) '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정(6개도시), (서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운영 중('21년 하반기 백신휴가 추가)

□ 정책 현황 (문제점)

- 비정규직 등 다수 노동자가 유급병가제도에서 제외(취업규칙, 단체협약 여부)되고, 사회보장 미흡과 적용 제외로 인해 상병수당 미실시(노동법 미적용 비임금노동자 문제 등)
-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다변화에 따른 노동법 미적용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사회적 보호(상병수당·유급병가 적용 및 확대)가 더욱 필요함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2021년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지원대상자 확대, 지원기준 완화,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 조항 복원)
- 2022년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 유급병가 (일정기준)제공할 수 있도록 법개정 必
- 2022년 서울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 개정 통해 임금노동자(50인)까지 확대 운동 필요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기준 완화 (중위소득의 100% → 150%)와 적용대상 확대(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50인까지 요구), 서울시 시비 재정 투여와 노동자기금 요구 통해 보완 검토
- (중앙) 상병수당 제도 도입 TF 논의 개입: 급여수준, 대상, 자격기준, 보장범위, 보장기간, 재정추계 등

(영역1) 과제 1-3. 전국민 고용보험과 취약계층 사회보험 지원

□ 정책·운동 목표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전망

- (핵심 내용)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방향(로드맵, 2025)에 맞추어, 서울시가 마중물 역할, 서울형 시민보험, 서울형 실업부조(구직수당)도입 검토, 사회보험료 지원⁵⁾
- (정책 현황) 서울시는 현재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 한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별도의 사회보험 지원정책은 부재한 상황

□ 정책 현황 (문제점)

- 현재 중앙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 일부(산재 특례125조) 직업직종과 플랫폼 노동(일부)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다수의 특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은 배제되고, 저임금/저소득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도 있음.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정부는 ‘소득 기반 중심’의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잡고 있고(부과 및 징수, 수급자 관리 등의 인프라 개편 : 고용보험 부과 및 징수법률 개정),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해당 정보 통해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서울시 노동기본조례에서 사회보험 지원 사항을 개정('22년 하반기)하고,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배달 등 다수의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추진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안과 맞추어, 추가 적용 대상 중 저임금/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보험료 지원 기준 수립(정부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제외 예상)
- 서울형 시민보험 형태로 다양한 일하는 시민보험(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형태로 고용 기반이 아닌, 소득기반의 선제적 모델 수립(연구, 제도 기반)

5) 서울지역 취약층 노동자(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는 현행 두리누리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일부 사회보험(국민, 고용)이 적용되고는 있으나, 사업주와 개인 특성에 따라 가입하지 않고 있기에 서울시가 이들의 보험료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영역2) 과제 2-1.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 설치

□ 정책·운동 목표 : 작은 사업장 및 취약노동계층의 노동복지 확충으로 격차 해소

- (핵심 내용) 서울시 주관으로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자(노동공제회), 사업장 단위 가입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복지제공
- (정책 현황) 기업규모 간 조직률, 복지, 노동권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작은 사업장의 인력수급현황 악화. 종합적 격차 완화 위한 통합적 정책시행과 관리 추진

□ 정책 현황 (문제점)

- 노조 유무에 따른 격차가 큼.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8%이지만 조직률은 54.8%인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임금근로자의 19.3%를 차지하지만 조직률은 1.7%에 불과함.
-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비용 대비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직접노동비용이 65.6%, 간접노동비용은 47.5%, 법정외복지비용은 35.9%로 특히 기업복지 제공의 격차가 큼.
- 이 결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미충원 사유는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음’이 가장 커서 인력 미스매칭의 가장 큰 이유임.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2022년 조례 제정으로 사업추진 근거 마련(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흐름 연동)
- 2022년 서울시 주관 공동노동복지기금 설립(조례 검토)과 기본사업비 출연, 노동자 가입규모 따라 기금 적립(단위 노동공제회 설립 근거마련 및 활성화 지원)
- 산업 연관효과에 따라 사업별 대기업 기금 출연 규정 검토(중앙정부 예산 지원)

[개정 법률]

- * 「근로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단체), 지자체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세부 규정 개정

[제정 조례]

- * 「노동공제회 설립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서울시가 출연하는 재원의 규모와 근거, 산업연관에 따른 대기업의 출연 규정
- 가입단위를 개별노동자가 아닌 노동공제회 단위로 두는 2단계 구조에 따른 보편성 논란

[영역2] 과제 2-2. 재난안전 취약층 지원

□ 정책·운동 목표 : 재난 안전 취약노동계층의 고용안정과 안전 보장

- (핵심 내용) 서울시 내 재난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 중에서도 취약노동계층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일거리 보장과 안전 보장을 위한 대체 인력 수급 등
- (정책 현황) 서울시는 관련하여 필수노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나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음. 현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급상병휴가 보장과 대체인력 수급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보조 등을 할 수 있음.

□ 정책 현황 (문제점)

- 필수노동 영역 초점 맞추어지고 있어, ‘재난 상황’이라는 전제조건 붙게 됨.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경우, 필수노동의 관점에서는 사업 지속·관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필수노동의 분야를 정부에서 지정할 경우, 필수노동과 비필수노동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누어질 위험도 있음.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및 노동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이 지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마련
- 재난 시 우려가 되는 일거리 감소로 인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필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 분야의 대체인력 수급 활성화
- 서울시의 유급상병휴가의 기준을 재정비하여 쉴 권리를 적극 지원하고 취약노동자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전달체계도 요구됨.(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전달하는 체계 구축)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재난안전 취약층 발굴 (현재는 필수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음)
-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정부 협조 필요

[영역3] 과제 3-1·2. 일하는 시민의 좋은 일자리 - 정의로운 전환

□ 정책·운동 목표 : 기후위기 대응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 (핵심 내용) 기후위기와 맞물려 산업전환과 노동이동의 정의로운 전환과 서울지역에서의 팬츠온 녹색일자리 만들기
- (정책 현황) 2015 파리협약 이후 정부의 탄소중립 및 산업·노동전환 대책(5회)이 발표되었으나 이해당사자(노동자 및 시민) 배제 및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전무

□ 정책 현황 (문제점)

- 기후위기 관련 법률(10여개 발의) 및 정부 대책 흐름에 비해 지방정부 조례·정책은 전무하고, 녹색일자리 및 교육훈련 또한 노동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현재 서울시는 행정조직 내에 ‘노동정책’부서보다, ‘기후환경’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중앙정부 :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등 협동)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2021년 하반기 서울본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제도화(조례, 정책, 사업, 거버넌스/위원회) 요구 시작하여, 2022년 대선·지선 정책화
- 현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례와 정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및 구청장협의회,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 시의회 조례 제정 요구

[제정 법률]

-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8) 따라 향후 지방정부 책무 시행(이젠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준비)

[개정 조례]

- * 「기후변화 조례」 개정, 「기후변화 기금 조례」 개정 또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 제정
-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1.2.22.) 참고 검토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법률 제정(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서울시 정의로운 전환 준비해야하나 내부 동력 無. 서울시의회와 서울단체들이 논의 수립 프로세스 요구 필요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전환 과정에서 고용의 질과 취약층이 배제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면, 이를 위해 논의 틀, 운영(위원회 등) 및 재정 등이 검토 필요

[영역3] 과제 3-3. 일하는 시민의 좋은 일자리 - 교육훈련·학습역량

□ 정책·운동 목표 : 디지털전환 시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위한 역량 강화

- (핵심 내용)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
- (정책 현황) 최근 법률 개정(평생국민직업능력개발)까지 되면서, 평생학습과 노동자의 직업능력향상 등 학습역량 및 숙련의 필요성 강화 흐름

□ 정책 현황 (문제점)

- 중앙정부의 개별 노동자 직업능력향상 강화 흐름에 비해, 지방정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정책은 부재하여 노동자 교육훈련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일자리정책과)
- 디지털전환 시기, 기존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비정규·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직업교육훈련 더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 부재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2022년 상반기 사이 지역차원의 노동자 교육훈련 논의를 시작하여, 2022년 하반기 서울 시장 선거 이후 제도화 필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현재의 지자체 상황으로 볼 때 교육훈련시스템은 광역(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권역별 시스템과 기초 연계형(참여)으로 하는 것이 필요

[개정 법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1.8.17 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1.1.5 개정)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개정 필요(혹은 별도의 조례 제정)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교육훈련은 대부분 평생교육 담당부서나 일자리정책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노동정책 담당부서 개입 사고 부재
-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 및 평생교육 정책 각기 담당부서의 통합적 정책 모색 통해 서울 지역 일하는 시민(취업자 및 구직 준비자 등)의 학습역량 필요성 공감 필요
- 기존 서울시 내부 교육훈련 기관(50플러스 재단, 기술교육원, 여성인력개발 및 **센터)의 전면 재편 흐름 속에서 모색이 필요한 상황

[부문별 과제 - 장애인 노동권]

□ 정책·운동 목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 (핵심 내용) ‘권리중심일자리’는 그동안 노동영역에서 배제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되었던 최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며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 제도를 사용하여 노동할 일자리를 제공. 그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해당함. 이는 기존에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중심의 일자리와는 다름.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권리의 존재를 인정받하고자 하며, 처음으로 장애인이 갖는 ‘노동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 (정책 현황) 지난 투쟁으로 2020년에 서울에서 출발, 2021년 기준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서도 작은 규모로 시범운영 중. 2022년 전라남도과 강원도 지역에서 사업운영 검토중

□ 정책 현황 (문제점)

- (권리중심일자리 현황) '20년 보조금으로 전담인력 인건비는 편성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위탁기관 자부담 전담인력의 과도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발생함.
- 권리중심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중 「참여형」 과 「복지형」 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일자리 유형은 기본 1년을 기간으로 계약하며 연속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년 7월, '21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공백기간 발생).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가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공공영역에서 시장영역으로 이전을 목표로한다면, 권리중심일자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함. 이에 최중증장애인의 연속적·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필요.
- (중증장애인 노동권 현황) 장애인 일자리의 부족,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장애인을 ‘노동 불가능자’로 낙인찍으면서, 장애인들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자격 자체도 박탈되고 있는 상황. '19년 기준, 전체 15세 이상 장애인 2,526,201명 중 취업자 881,890명을 제외한 미취업자는 1,644,311명으로 확인되었음. 이 중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8,055명이었고, 이 구직자 중 '지난 주 일이 있었으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59,247명이어서 최종적으로 실업자로 판별됨. 미취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이며, 1,585,065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미취업자의 96.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⁶⁾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 생산성, 효율성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작업능력을 평가, 9,000여명의 장애인이 몇 년째 꾸준히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노동하고 있는 상황임.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합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있음. 이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년 기준으로 무려 9천명이 넘음.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년 37만원에 그쳤으며, 한 달에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0%에 달함. 현재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작업능력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함. 정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변경했지만, 도리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는 그 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
- 재활이념의 실패, 직업재활시설의 시설화: '재활'은 끊임없이 장애인이 정상적 노동력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기에, 현재의 장애인의 신체를 비정상적으로 낙인찍고, 장애인 개인에게 장애를 극복할 것을 요구. 한편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음.
- 현 의무 고용율 제도, 고용부담금 제도의 한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핵심 조항인 의무고용률은 그 자체로도 그렇고, 실현 정도로도 봤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이중노동시장 발생.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의 제시 필요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22년 서울시 예산 모니터링 필요
-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대상 예산 매칭 협의 필요.

[개정 법률 및 조례]

*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관련 근거 법률 및 조례]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제53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8조의2,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71p, [그림 2-3-1]

- '21년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2년 사업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22년 500명 채용요구
- '21년말에 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22년 1월부터 일자리를 제공,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 장애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 전담인력 배치 '22년 2명 확대 이후 점진적으로 사업참여자 비율에 따라 전담인력 예산 지원

[부문별 과제 - 빈곤층 자활 일자리]

□ 정책·운동 목표 : 자활 일자리의 질적 양적 확대

- (핵심 내용)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노동이자 복지가 되기 위해 일자리 종류의 다양화 및 양적 확대, 참여 여부와 기간 선택이 자유롭고 적절한 보상(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자활 일자리로 전환
- (정책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19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희귀질환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없음” 또는 “유예”를 받지 않은 수급신청자에게 자활사업 일자리 참여가 조건으로 부과되고,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수급권 박탈

□ 정책 현황 (문제점)

-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자리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그 수가 적으며, 참여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어 있음
-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실제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일반노동시장에서 배제 및 밀려난 이들에게 자활기업 창업 또는 일반노동시장 (재)취업을 우선 목표로 하며 실제 자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게이트웨이(교육) 과정을 마친 이후 참여할 수 있는 자활 일자리가 없는 경우 알아서 취업하라는 서약을 받는 지자체 발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자활 일자리의 고질적인 문제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것으로 예상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단기) 조건부수급이 최초 확정되거나 게이트웨이 과정 중, 과정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수급 전환 선택권 부여 및 급여 지속 개시
- (장기) 근로능력평가를 적용제외하여 자활 일자리 참여 여부를 선택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 종류 다양화, 참여기간제한을 폐지
- 게이트웨이 참여자 및 자활 일자리 참여 대기자 수를 파악하여 일자리 수 확대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

[개정 법률]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필요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실태파악 및 예산추계 필요

[부문별 과제 - 홈리스 노동권]

□ 정책·운동 목표 : 홈리스 일자리 정책의 재편 통해 노동할 권리 보장

- (핵심 내용) 저임금·불안정 민간일자리, 직종의 진입 통로로 작용하는 서울시 홈리스 일자리 정책을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
- (정책 현황) 서울시는 민간일자리 유도·연계를 홈리스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이는 홈리스 당사자의 저임금 직종·불안정 일자리 진입, 공공일자리의 질적 열위·양적 축소로 귀결되고 있음.

□ 정책 현황 (문제점)

- 서울시 홈리스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조는 민간일자리 취업이나, 실제 정책사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은 건설일용 등 특정 직종에 편중돼 있고, 고용 기간 역시 1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노동지위와 노동조건이 불안정함.
-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수 년 간 공공일자리의 양적 축소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2017년 이후 민간일자리 연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수와 지원 예산은 '공공예산 절감' 명분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질적 열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서울시 홈리스 일자리 정책의 주요 특징. 원칙적으로 1년에 3개월만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고, 급여 역시 월 70만 원대에 불과(생활임금 미적용). 서울역 인근 염가거처(고시원·쪽방)의 월 임대료가 25~30만 원에 이르면 감안할 때, 반일제 일자리 참여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해야 함. 직무 역시 노숙인 시설의 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대상자 선정에서 시설입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거처 형태에 따른 차별도 발생하고 있음.

□ 정책·운동 방향 (이행 시기)

- (단기)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확대, 충분한 참여기간 보장, 거처 형태별 일자리 차별 시정 - 2022년 서울시 예산안 및 사업계획 모니터링 실시
- (중장기) 정부·서울시의 홈리스 일자리 정책의 기조 전환. '노숙인 등' 인권상황 개선 위한 당사자의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도록 요구. - 제2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2년 상반기 예상) 발표를 전후하여 대응 본격화.

□ 쟁점 사항 (법률, 재정, 기구 등)

- (중양)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조화하는 현행 「노숙인복지법」 개정 -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법개정 이를 수 있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 요구됨

- (지자체: 서울시) 사회적 가치 인정하는 공공일자리 시행 - 재정소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기존 시설업무 보조에서 벗어나 복지서비스 확대 및 인권상황 개선과 선순환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전면화. 서울시의회(복지위)의 개입과 역할 필요하며, 정부-지자체 간 예산 매칭이 선결 과제

[부문별 과제 - 젠더·성평등]

□ 정책 목표

- 육아 및 돌봄의 문제를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구조마련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성평등 헌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 마련

□ 성평등 돌봄 정책

- 돌봄노동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제로 포섭하여 보호
- 육아임금 지급. 육아노동을 다른 많은 노동과 같이 직업으로 인정되어 아이를 둔 가정은 사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며 연금과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육아의 직업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실시
 - 누구나 첫3개월 통상임금 100% 인상 유아휴직 사후지급금
 - 사회적가족 돌봄휴가 유급화 사회적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제고
 -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강화 위반시 처벌강화
 - 출산휴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 부진 명단 공표 및 관리감독 강화
 - 사업주 가족돌봄휴직제 삭제 유연근무제 확대
 -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 성차별 해소 정책

- 채용 성차별 금지
 -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
 -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
 - 채용 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채용기준과 절차 접수 등 채용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
 - 성별임금공사와 후속조치의 정부책임 강화
 - 공사의무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정부 컨트롤 타워 수립 등 명시
 -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강화
 - 젠더 거버넌스 구축-모든 행정에서 젠더불평등 발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 젠더거버넌스 구축과 젠더의제 전문가 및 활동가 인력 배치

□ 여성이 안전한 일터

- 직장내 성폭력 성적괴롭힘 사업주 벌칙조항 확대와 피해자 지원 강화
 - 직장내 산업 재해 범위에 포함, 피해자에 작업 중지권 부여, 업무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 성범죄 조사 후 적절한 조치 징계 미이행시 처벌 추가

□ 실현 방안

- 2022년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 돌봄, 성차별노동, 여성안전일터
- 2022년 예방적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서울시-노동청 업무협약 체결/시범 운영 공조

[참조] 서울시민·노동자 설문조사 중 주관식 응답 결과

서울지역 노동문제 의견	서울시 및 자치구에 대한 의견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시급-시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찾아보면 단순 일자리라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함.	자치구 별로 뭘 한다고는 하는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취업만이라도 제대로 알선해 줬으면 한다. 문의를 해보면 여기는 어떠해서 한된다. 다른데서 알아봐라 등등 성의없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함.
소외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종업종의 빠른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근로정책필요	신종업종의 실태조사와 근로정책필요
여성 일자리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여성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의 일하는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민고아이를 맡길수있는곳이필요해요	아이맡길곳과경력단절여성지원필요해요
노동자들이 편안한 서울 생활할수 있도록 집값 지원을 많이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취업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지원들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 필요 다양한 상담기관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동으로 진행 하면 좋겠음 부서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권리를 행사할때 오는 불이익이 너무도 크다	노동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권리를 누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게서는 요원한 이야기다 너무 힘든 소리다.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중소기업의 야근 수당, 추가 수당 및 최소 권한 행기기를 관리 및 감독
서울시에서 일자리관련 정책들을 펴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일시적 땀땀이란 느낌이 든다.제대로 된일자리와 연결이 안된다	서울시에서 일자리관련 정책들을 펴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일시적 땀땀이란 느낌이 든다.제대로 된일자리와 연결이 안된다
저소득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최저임금올려는 정도맞춰주어야한다고생각한다	우리마을에 너무노화된곳을좀더깨끗하게살수있도록 발전시켜주었으면좋겠습니다
고용문제의 사각지대가 있는편이라 생각합니다	업무의 진행과정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 민원업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어야한다	문화활동을 많이 했음 좋겠다
중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노동행위와 위반등에도 신경써주길 바람	플랫폼 혹은 감정 노동자에대한 구별 자치기구와 강력한조치 및 상담을 제공해야하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감시.
정책으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함. 현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리강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고, 기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에 대해 묵인, 방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정규직 사원을 늘려주세요	공무원 좀 그만 뽑아요 철밥통인거 아는데 국민이 호군가요? 적당히 좀 해요 일하라고 뽑아준건데 세금루팡이나하고 한심해요 오세훈씨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많은분들한테도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히 이웃과 소통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현재 좋다고 생각한다. 자국민우선이 되었으면한다.	
코로나때도 자국민은 빛내서 살고있는데 외국인은 나라에서 돈받고 있다는얘기도 들었다	
지역 계층 나이 성별 간 갈등심화 해결 필요	원칙있는정책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필요함. 서울시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조차도 지키질 않음 서울시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조차도 지키질 않음 서울시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정책이나 기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 실효성이 떨어져서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정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관련 정책이나 기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 실효성이 떨어져서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정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임금체불 업체 3진 아웃제 같은제도 시행	좀 더 노동인권 확보 도와주세요 관리감독 철저
사무직 노동자가 많아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것같고 영세 업체도 많아 노조가입 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좋은 근로환경이 갖춰질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니

다. 고용노동에대한근로자의최소한의권익을위해활동하는비영리기관또는단체가있다면적극홍보해주면좋겠다.	
가급적 시장에 맡겨 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함.	절대적인 기회 균등보다는 실질적 기회 균등을 제공하여 역차별을 없애야 함.
접근이 용이한 일자리 검색이나 알선필요	접근이 용이한 일자리 검색이나 알선필요
현장에서 듣는 정책수립	탁상행정좀 그만하고 현장실태파악좀 제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소상공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방법 고민해주세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소속 직원들이 고용해지가 되었을때 지원방법 고민해주세요
일을 안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지갑이 투명한 것처럼 열심히 노동 하는 인원도 지원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지원금 받게해주세요. 코로나 상생 지원금의 경우도 경기도는 다 주고 서울시는 안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기업체의 청소노동자, 아파트의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는 노동시간이 지켜지고 있으나 소위 스타트업이나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해결을 서로 미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한다
정책 시행이 확실히 되고있는지 실태조사, 기관 및 기업 평가에 해당내용 감사, 신고자 익명보장	정책 시행이 확실히 되고있는지 실태조사, 기관 및 기업 평가에 해당내용 감사, 신고자 익명보장
이것저것 이름만 내걸지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실행하자	
단순히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보호를 받을수있는 규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 군, 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구요.
소외되는 직업과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 노동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단기 일자리인 공공근로를 남발하면 안 된다고생각함	긴밀한 협력으로 공무원 인원 낭비가 되지않게 조율필요
산업재해 및 실업급여를 자주 신청하는 사업장은 직접근로감독관이방문하여문제가잘해결되었는지를확인했으면함	지역 편중이 심함.
지금 시장은 노동문제보단 전시성 행정에 예산 투입 저소득층만을 위한 정책보다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 시장은 노동문제보단 전시성 행정에 예산 투입
영세사업주가 고용유지 할 수 있도록 근속연수 오래된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추가 상여금을 주면 좋겠습니다.	영세사업주가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있는지 대표업종이나 대표 산업 업체들에게 지원방향이냐 애로사항을 적극반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마다 성격이 서로 다른 노동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자치구의 노동문제점을 항상 협업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내 한 자치구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각 자치구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세금 좀 안들어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세금으로만 해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심성의껏 도와주세요	서민들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주세요
시 산하 공공기관 일자리확충 확대	시,구 산하 공단 등 일자리 확대 필요
좋은 정책은 많은데, 현실 적용 과정이 동떨어져 있기에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가 낮고, 결과물도 현저히 적다.	실천을 통한 결과는 얻기 어렵고, 현수막과홍보안내지만어지럽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범위를 더 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제, 교육이수를 통한 노동 및 근무여건 개선. 승진 및 보수 반영.	

젊은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복지 정책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않으니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책을 좀바꿨으면 좋겠어요
영세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지원으로 고용 확대 기회 제공	1년이상 성실한 납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국민이 필요한 의료나 노동법등 재검토해서 좋은방향으로 이끌어야함	
업종에 따른 편중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어떤업종 좋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그 업종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업종의 작업 허가를 너무 쉽게 허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종에 대한 지식과 경력, 자격증 등이 없어도 그냥 직업을 할 수 있다는것이 그 업종의 전문성과 도덕성, 안정성 등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간단한 교육 이수 또는 이런 이수교육 조차 없이 그저 일을 할 수 있다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시간 교육 이수한 후 3개월 일 한 사람이 20년 일한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현재 입니다.	어떤 큰 단체의 노동 조합이 아닌 더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있는 일반 노동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노조? 귀족노조라는 말이 그냥 생긴게 아닙니다. 노조가 파업하고, 노조와 협상 해 봐야 실질적 인프라가 몇 배 더 많은 노동인구는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노조를 형성한 단체와 협상과 협의를 진행하고, 노조가 아닌 순수한 일반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것.
실업급여나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취직은 좋은나 그걸 악이용하여 열심히 일안하고 쉬은일..그러면서도 돈많이받고싶어하는..힘들면 관두고..이렇게 사회가 만든것같아 아쉬운점이 너무 많습니다	
열악한 곳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좀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
일자리의 질 향상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달장애인들의 직업군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전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편중되지 않은 부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노동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편중되지 않게 균형에 맞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라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편차 있습니다. (여건 좋으나,비정규직 공공노조 분회 가입후 묻어가기 식으로 권리만 찾는 체리피커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편중되지 않게 균형에 맞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라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편차 있습니다. (여건 좋으나,비정규직 공공노조 분회 가입후 묻어가기 식으로 권리만 찾는 체리피커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숫자채우기를 위한 임시일자리 만들기는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공공근로같은 것보다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만들수있는 정책이필요함	일자리를 정치적인 관점이아닌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하며 모르는분야에 어설픈게 이것저것 시도하지말기를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역차별 받지않도록 과도한 복지는 피할것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나섰으면 한다.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한 자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급여는 열악한데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청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어 아쉬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노동인구 대비 일자리 부족	더 많은 전문 일자리 교육
근로여건과 복지 반드시 필요	소외계층 관심을 가지고 점차 확대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제대로 실현 가능한 복지 해결
취약 계층의 노동시간이 보장되었으면한다	노인들의 일자리
직장내 인권침해를 고발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거주지는 서울이나 직장이 경기도로 서울지역 노동문제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받는 것이 없음	거주지는 서울이나 직장이 경기도로 서울지역 노동문제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받는 것이 없음
서울 시장이 직접 신경써서 노동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자치구청과 서울시가 서로 잘 협조해야한다
청년층 취업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가족부양)을더욱고려해야한것같다.	
코로나19로 경제권이 어려울 시기에 취업문제나 회사복지 및 여성인권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할자치구에선 복지제도나 안전방역수칙 문제점 개선 할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디든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 주려고하는데, 제일 기본인건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노동과 특히 정신적 건강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취업할수 있는 곳이 늘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업 유치 지원
건설현장의 경우 법으로 규제를 하는것도 좋겠으나 노동자 자신이 안전하게 일하려는 마음을 상기 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것 같다	각 구청의 사업에 있어 공무원들의 권위 의식으로 일하는 자세는 좋지 않아 보인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필요	공공일일근로는 근로에 대한 감독이 허술함
여러모로 피고용자보다는 고용자 쪽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면 좋겠네요	좋은 정책과 제도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소용 없을 거 같아요. 잘 알 수 있게 홍보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말에 좀더 귀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노동자 안전규칙강화필요 지키지않는 사업장 처벌강화	산재인정범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함께 반영되어 우리처럼 의료업쪽 5인 미만 최저임금도 안되는 주40시간 110만원 근로자들을 구제해주고 연차도 강제로 쓸 수 있게 하고 대체휴일도 5인 미만도 적용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노동문제 해결 노력이 아닐까한다	5인 미만 최저임금 안주는 사업장들 불이익을 주세요
생활임금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단순노무성 일자리 등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활임금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단순노무성 일자리 등은 없었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과 정책을 펼치는 것 같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임시, 계약, 특수, 일용직 등)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매우 심각한 수준.	관내 불법, 유령, 다단계 사업장 및 임금체불, 노동착취, 미성년자 고용 등의 감시활동을 통한 유령기업 퇴출.
인구불평준화로 인한 일자리 및 거주환경이 서울지역인 사람들이 많으나 회사들은 세제혜택을 받고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으로 좀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장은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시정했습시다	구청에서 하는일은 한계가 있어보임
급여보다 물가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 속도(집값오르는 속도)를 잡을 수 없다면, 기본급이 그에 맞춰 오르거나 그에 맞는 국가 정책이 시급함. 그렇지 않다면 기본 근로활동을 열심히 하고있는 사람들도 일할 의지를 잃게 될것	정책보다 실업급여나 재난지원금 등과같은 것을 부정수급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에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다.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지급	공공 일자리 추가 마련
정규직전환자들 임금이 더높아요 . 비정규직때 근무 경력 포함되어서요 그만좀 전환시켜요	구청장들은 열심히함 비정규직들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하려는 심보
남녀차별, 직장내 괴롭힘은 여전히 뿌리깊게 박혀 있고 달라지지 않음. 법적인 방법들이 생겼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해자가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힘들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차별 또한 여전히함.	뭘 개선하고 무슨 정책을 하고있는지 알 수 없음. 변화 전혀 모르겠음. 예산과 세금으로 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음.
정확한실태파악과정책수렴	탁상공론이아닌참다운공무원자세필요
질 높은 일자리 필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노동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 있음
성별 연령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안전한 일자리 창출을 바랍니다	낙후되지 않는 자치구가 없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성보호 대상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 지역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노인인구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주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등등 필요	정신문제 우울감등등 심리치료 관련직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음
관련 사각지대 현실생활에 맞는 작아도좋은생활비와적은시간대노동이	연세가 굳이 높아야만 하는 일자리, 아직고령이아닌중,장년층의하소연중

좀더광활했으면합니다.	생활파악이시급해보임(보이는듯 보이지 않는 생활력의 사각 지대) 당장먹고살수없는데 조건이 안된다하며, 눈뜨고바라보다죽어야하는 일이 없기를...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한 기본적 인권 보호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이거나 사회 소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한 합법을 가장한 불합리한 조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비정규직, 일용직의 안전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통일된 계획 수립 및 실행	서울시와 자치구의 통일된 계획 수립 및 실행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 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 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	감염병사태에 의료진들의 처우개선
도시의 특별한 구조를 감안한 고용 노동자 특별 대책	구마다 다른 환경에 따른 정책 실시
지금도 충분히 일자리 지원과 청년에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정말 힘든일을 안하려는 게 문제다.	지원이 지나치며 오히려 더 지원에 의존한다.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자
청년과 노인들만이 아닌 중장년층 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 필요합니다!! 40~50대 역시 어렵긴 마찮가지 인데 왜 청년과 노인 아이들만 걱정하는 정책만 있는지...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음...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또는 구청을 찾는다 생각함!! 문제는 정확한 관련 부서를 찾기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을시 관련부서 찾기가 너무 어려움 !! 웬만하면 자신의 부서가 관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함...
기본복지가 확대되어야한다	제도마련과 관리
은퇴자 일자리 확충과	고령자 일자리 마련과
빈곤층일자리마련	직업능력교육실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원장1명, 보육도우미1명, 영아3명인 어린이집에 어르신도우미 3명을 지원한 것을 보았다.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길 바라며 따름이 세우는 곳에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따름이를 세우는 시민한테 제대로 세우라고 야단치시는것을 봤는데.. 옳은것인지.. 그래도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데 기본 마음가짐은 되어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 사업 바르게 하길 바란다	
청년 지원 직업사업 확대	중장년 정규직 근로 사업 확대
학원 주말 수업 금지 법제화(학원의 근로 환경 매우 열악 함)	학원 원장들의 불법 행위 감독 강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 하지 않나요.	청년급여나 자영업자 지원금등 예산 낭비 아닌가요?
비정규직의 휴가와 연차의 정당한 보장, 최저임금 보장, 업무무관 잡무에대한 제재	일자리 창출방안과 교육 제도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이 직제로 인한 양극화 차별화를 좁혀야 한다	시의 정책과 자치구간의 의견조율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이상의 임금 보장	일시적 일자리 지원 정책이 아닌, 고급 기술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지원 필요.
노동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적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지원이 부족함	맞벌이, 1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후순위로밀려서육아에대해아무런지원을못받다는것은별개의 문제이며, 발생해서는안된다고생각함.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	최저임금 인상 필요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	노인, 장애인 고용정책 강화
사장들이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힘들어요ㅠㅠ 사장들 교육을 시켜야해요	사장들이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힘들어요ㅠㅠ 사장들 교육을 시켜야해요
여성들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 힘써주시길	여성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여성의안정성과안전성보장
퇴근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위험한 장소를 미리점검하여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이 필요함	과한 계발... 불필요한 곳에 세금을 쓸 게 아니라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시길
필요한곳은 인력이 안 뽑히고 취업준비생은 취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사례가 많이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5인 미만 회사와 관련해서 노동법적으로 지켜지지않는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할거같다 업계특성상아근이많은데,이에대한근무시간에대한보상이법적으로보완되었으면좋겠다	지역내에서 지역주인이 취업연계되는 부분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도마련된게있으면충분한홍보를통해누구나이용가능하도록유도되었으면좋겠다
실업급여 기준을 더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되도록 개선필요	실업급여 기준을 더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되도록 개선필요
여러방면의 전문가와 근로자 의견 청취	여러 전문가와 여러 근로자 의견 청취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꾸준한 현장 탐방,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만닿아 있는 서울시의 노동 정책을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실버 일자리 사업인듯,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조끼 입고 시간 보내고 돈받는 사업 말고 정말로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는 사업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역에 관련한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을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말고 그냥 비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게 함. 그리고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주므로, 11개월에 일자리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음. 그냥 1개월 단위로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음.	다만 청년들과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시급함
피부에 와 닿는 노동정책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시와 구청이 연계하여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 줬으면 한다
영세사장장 고용주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 이 나라에선 사업하기 힘든구조로 점점 되어가게 될 것 같다	
지역노동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수립	개인별 일자리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수립
52시간제 적용 이후 재택근무로 이를 피하는 꿈수가 늘었으므로 이를 단속할 방법이 필요함.	
최저임금제도가 좋은건지 잘 모르겠다	따릉이 정거장 좀 없애지마세요
평등한 기회	꾸준한 관심과 지원
구직 문제가 원활할수 있도록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노동자들의 현장안전문제 개선 너무위험한환경에노출된노동자들이많은데안전불감증으로 최소한의안전보장도하지않고노동에참여한다	여자만 편한 당직서는게 매우 불만
인권문제	취약계층돌봄
일용직은 전혀 4대보험 자격을 못받는다 이와관련 대처가 필요	나이가 70이 되어도 똑똑하고 전문적인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인적자원을 널리 고용하는 자리가 있기를.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도 빈약합니다. 이런프리랜서들에대한지원을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들의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이력서에 학력란 삭제해 주세요.	몸을 쓰며 힘들게 일하는 대가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임금과 일자리 노동 복지 .화장실..음수 휴식공간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노력요함
지역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함	비정규직도 자리를 좀더 늘렸으면함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노동문제에 더 많은 관심.	임시적이지만 양질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에대한 시급1만원이 되기 위한 기업들의 참여유도	당장 하루살아야하는 일용직 일자리 정보공유 시스템구축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동일한 업무시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의 남녀 노동 임금 격차를 줄이는 타이트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저 선택 항목들 중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선택하라는 거 자체가 좀 웃기네요. 매우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저걸 다 실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실현이 가능할지 등을 그리고 개선할 점을 물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서 자치구에서의 방안, 대응보다 정부와의 방안, 대응이 긴밀하게 협업하고 더 세밀하게 움직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서울시에서 플랫폼 노동자 이것, 저것 해주시겠다고 언플 하시는데 남초 말고 여초 노동에 대한 것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반발이 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쉽게 노동과 접하고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하겠습니다	다양한 취업 채널 마련해야합니다
법정 휴가나 휴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소규모 사업자에서는 더 그렇다. 대체 인력이 충원되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나 위탁 시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코로나뎀에 힘드니깐 조치가 필요하다
출근시간대에 따른 교통비 할인	출근시간대에 따른 교통비 할인
쾌적한 근로환경	효율적인 인력분배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적절한 임금이 반영되면 좋겠다
양질의 일자리는 자리가 부족하고 누구나 기피하는 일자리는 인력이 부족한상황 이를두고청년세대의잘못으로몰아가는기성세대다뤄지고다시시작해야한다생각함	
현재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것 같다. 정보공유및홍보가절대적으로필요한것같다. 알아야의견이생기지않을까?	대선같은 큰 정치 이슈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유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휴가 보장! 휴가 안 주는 회사 신고포상금!	휴가 보장! 휴가 안 주는 회사 신고포상금!
소규모 회사라도 4대보험가입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프리렌서 관련한 보험문제들도 해결됐으면 합니다	상당장구 활성화
40대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직도,육아후취업도어려운나이같아요.남자나여자나성별 상관없이기회들이있을수있는사회가되면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교육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 일자리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한편, 노동법을 악용하여 이용하는 고용주, 노동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ex. 단순 자진퇴사인데, 거짓으로 신고하여 퇴직급여 수령 등)	
최저임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단속 및 처벌 강화	최저임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단속 및 처벌 강화
청년층을 위한 직장 및 주거 통합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과 여성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 부서가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바람	관련 부서 및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꾸준히 해야함

토론문1

너머서울 서울시 노동정책 토론회 토론문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토론문1

너머서울 서울시 노동정책 토론회 토론문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1. 기존의 법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일하는 시민의 보호

최근 노동시장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같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의 밖에 놓여 있습니다. 발제문에 따르면 서울지역 비임금노동자 중 비전형 노동자로 구분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규모가 2018년에서 1,089,991명에서 2020년 1,505,112명으로 약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으로는 이들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고용 상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시민은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상상력이 필요함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분명한 위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들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기업단위를 넘어 전국 및 지역 수준의 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동행정 정책의 필요성

‘너머 서울’ 의뢰로 2021. 11.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민과 노동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73.8%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고, 박원순 시장 시기 노동정책은 27.3%(보통 39.8%), 오세훈 시장 시기 노동정책은 17%

(보통 44.3%)로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에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9. 4.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2019)>를 발간하였습니다⁷⁾.

이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노동행정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기획·집행하는 중앙집중-정부주도적 성격을 지니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행정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노동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⁸⁾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슈리포트는 서울특별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인 노동행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4. 3. 20.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5. 4. 29.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종합적인 노동행정을 펼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의 4대 정책과제로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제시하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보험 적용, 마을노무사,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지역 노동자(가사노동자·택배기사·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노동행정의 가이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으로 교체된 이후, 서울시는

7)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621155> 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8) 정치권 또한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IBAiDe>)’에서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등 노동정책을 공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19대 대선 공약집(<http://bit.ly/2MaRIIZ>)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19대 대선 공약집(<http://bit.ly/2MaRIIZ>)에서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확대 등 노동정책을 공약하였음.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사업을 중단하고, 2022년 노동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더 이상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3. 22년 서울시의 대폭적인 노동예산 삭감과 그 문제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수이긴 하나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노동센터를 설립하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광역차원의 취약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 법률 상담 및 종합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1개소’, ‘휴서울 노동자 쉼터 5개소’,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⁹⁾ 이들 기관은 ‘일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취약노동자’를 초점 집단으로 설정하고, 필수노동자, 이주노동자(특수고용), 미디어 노동자, 셔틀버스 노동자, 취약계층노동자(보육교사 등),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특성화고 청소년 등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¹⁰⁾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예산이 2021년 319억 원에서 268억 원으로 51억4600만원으로, 16.1% 감액되었습니다.¹¹⁾ 노동·사회적 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 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이 11억 3800만원(28.2%)으로 감액편성 되는데 이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7억 4200만원(29.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2억 1900만원(13.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0억 2600만원(48.9%),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6억 3천만원(55.2%),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협동조합지원센터) 3억 3천만 원(29.6%) 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정원이 4명인 자치구센터 센터당 1명씩 해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¹²⁾

9) 2021. 11.17. 서울시 노동정책에서 노동센터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이철 발제문, ‘서울지역 노동센터 활동성과와 과제’ 1쪽 참고
 10) 2021. 11.17. 서울시 노동정책에서 노동센터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김종진 발제문, ‘서울시 노동정책평가와 노동센터 개편방향-지역 노동센터 모델에서 노동재단으로 전환’25쪽 참고
 11) <https://www.nocutnews.co.kr/news/5665651> 노컷뉴스 2021. 11. 30. 자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 노동·사회적경제 예산 삭제 수준” 기사 참조
 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49> 2021. 11. 30.자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

광역시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 현재 서울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해 제도권 밖에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시의 비전형·취약계층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권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서울시가 이와 같은 기존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4. 서울시는 다시 적극적 노동정책을 실시하라!

서울시는 기존에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노동행정의 모범이 되는 다양한 노동행정을 펼쳐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 취약계층 노동자는 제도권 안에서 일정정도 보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노동예산 삭감으로 인해 그 모든 제도적 토대가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함께 디지털 전환·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현재 절벽까지 밀려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노동예산안을 회복하여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2

‘노동존중특별시’의 너머로 가기 위한 과제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토론문2

‘노동존중특별시’의 너머로 가기 위한 과제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

1. 지난 10년 서울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의 성과와 한계

-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이후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슬로건 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정책행정부서 설립, 생활임금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 다양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을 통해 국가차원의 노동정책을 선도하고 이끌어왔음
-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정책도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의 새로운 형태 등장에 맞추어 변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의 통합 과정에서 ‘공정담론’이 등장하고 공공부문의 팬찮은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간 서울시가 집중하지 못했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을 넘어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노동, 자영업자까지 그 요구수준과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었음
- 한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노동으로 대표되는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며 노동자 이해대변과 정책니즈 조사와 반영에서도 기존과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조사에서 나온 의미 해석

(1) 노동정책의 필요성과 평가

가. 중앙만이 아닌 지방정부 노동정책 필요성

* 필요 73.4%(어느 정도 50.3%, 매우 23.1%), 필요하지 않음 8.6%(전혀 2%, 별로 6.6%), 보통 18%

나. 박원순 시장 시기 노동정책 평가

* 잘한 편 27.3%(어느 정도 23.7%, 매우 3.6%), 잘하지 않음 32.9%(전혀 13.8%, 별로 19.1%), 보통 39.8%

다. 오세훈 시장 시기 노동정책 평가

* 잘한 편 17.0%(어느 정도 12.8%, 매우 4.2%), 잘하지 않음 38.7%(전혀 18.1%, 별로 20.6%), 보통 44.3%

- 서울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높아 지난 10년간 지방정부 (기초 포함)의 노동정책이 일반적인 행정영역에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음. 지난시기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하지 않았음이 높기는 하지만 보통과 잘한 편을 합쳐서 고민한다면 노동정책의 효용성이 꽤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잘한편이 27.3%라는 것은 예상보다 꽤 높게 나온것이라고 생각)
-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기존 박원순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낮는데 이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향후에도 시행될지 불투명) 시의 행정홍보 등에서 후순위에 위치함으로서 체감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함

(2) 고용의 질 인식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44.9%, 3.41점),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미흡과 부족’(45.9%, 3.45점) 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40%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 흥미롭게도 고용의 질 인식에서 비정규직 문제, 고용불안, 저임금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았지만 사회안전망 및 교육훈련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은 비교적 낮았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만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영역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함. 고용불안, 저임금 문제 등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노동문제임. 그러나 이 문제들의 해법이 오히려 사회안전망, 교육훈련 등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해법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시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오히려 사회안전망, 교육훈련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이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고용불안, 저임금의 해결책으로 다가갈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노동정책의 중요성, 정책의제

서울시민과 노동자 1천 명에게 <서울시 노동정책 의제별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산업안전 예방 등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지원’(79.6%, 4.12점), ‘아프면 쉬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정책’(78.3%, 4.11점)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동정책의 정책의제별로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산업안전 예방,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최근 변화된 노동의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저임금, 고용안정 문제만이 아닌 쉴 수 있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지방정부 노동정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함

3. 향후 과제

- 서울시 행정의 변화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한 ‘유니온시티(Union City)’의 개념을 더 다듬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념이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약 슬로건으로 제기) 다양한 노동형태가 빠르게 출현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현재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서울시 노동정책은 이제 모범사용자 모델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그간 민간으로의 확대, 노동조합(공공부문이 아닌 지역본부나 산별노조와의 협력)과의 협력모델 등이 부족했던 현실이 있음. 모범사용자 모델이 민간에 확산되지 못하면 자칫 공공부문과 민간의 격차를

만드는 형국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에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노동정책의 영역을 교통, 복지 등의 영역까지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자치구 노동센터 등의 노동자 이해대변 기능을 높여야 함. 특히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집단적으로 이해관계를 표출하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 대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고용질서 점검 및 감독의 영역에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지방노동청의 협력모델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원하청 간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성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지역의 경우 원하청보다는 지역 차원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성이 필요함. 법개정 등 제도개혁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교육훈련은 대부분 평생교육 담당 부서나 일자리정책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노동정책 담당 부서 개입 사고 부재

-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 및 평생교육 정책 각기 담당부서의 통합적 정책 모색 통해 서울지역 일하는 시민(취업자 및 구직 준비자 등)의 학습역량 필요성 공감 필요
- 기존 서울시 내부 교육훈련 기관(50플러스 재단, 기술교육원, 여성인력개발 및 **센터)의 전면 재편 흐름 속에서 모색이 필요한 상황

- 발제의 이러한 지적에 매우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울시 노동정책이 개입하지 못한 분야라 할 수 있음

토론문3

노조 밖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정책과 노동조합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토론문3

노조 밖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정책과 노동조합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1.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

- 너머서울이 실시한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필요성은 높지만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낮음.
 -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잘 하는 편’ 또는 ‘매우 잘함’으로 평가한 응답이 오세훈 시장 시기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17%, 박원순 전 시장 시기에 대해서는 27.3%임.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낮은 것.
 -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정책을 선도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노동자들에게는 효능감이 낮거나(현장과 괴리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음. 이는 현시기 노동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현장의 요구에 비해 정책은 느리거나 미약한 상황이라는 점,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협소하고 공공부문 중심의 정책(공공-민간의 격차 확대)에 집중됐던 점, 서울형 유급평가제도와 같이 제도를 설계했음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비중이 매우 낮아지고 후퇴하고 있음. 기존 노동관련법 및 지원체제로 포괄하기 어려운 비전형·불안정 노동자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등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
- 노동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느끼거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나, 중앙·지방 정부의 노동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내지 사회적 시스템·거버넌스,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요구가 개별적 노동소득·일자리 등에 대한 요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절반 이상이 권리 보장과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다른 영역의 권리 보장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단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68.2%)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필요성에 57.7%만 동의했고, 단체행동권(쟁의행위)에 대해서는 50.8%만이 동의함. 이는 정부와 언론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태도, 노동조합 스스로 노조 밖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 문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의견에서 노동이사제, 성별 임금 공시제, 취약층 휴가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노동문제의 심각성 인식 조사에서는 교육훈련 미흡, 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 문제, 4대보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음. 노동정책의 중요성 측면에서 여성노동자 건강과 모성 보호,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기후위기 대응 고용노동정책, 자치구 노동 전담 조직 운영,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런 경향은 실제로 서울시 정책 시행이 잘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덜 심각한 현실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과 임금 등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정책과 법제도를 통한 해결 내지 혜택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또 반차별·인권, 기후위기 대응 등 노동문제와 연관된 사회 문제 및 정책들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너머서울 노동+사회안전망 정책팀에 결합해 여론조사 및 정책과제 논의를 함께 진행해왔음. 따라서 발제문에 제시된 정책과제에 대부분 동의함. 다만, 다음의 몇 가지를 강조, 부연하고자 함.

○ 지역사회(커뮤니티) 수준의 노동정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즉,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작은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더욱 초점을 맞춰 수립·시행되어야 함.

- 발제문에서도 밝혔듯이, 코로나19 재난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전통적인 노사관계나 기존 법제도와 정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비전형·불안정 노동자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이를 반영한 법개정과 제도 변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광역·기초자치단체 및 동네 단위) 수준에서 취약노동자 및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 마련 및 정책 전달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

려움.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중앙·지방정부의 노동정책 홍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계도 및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들, 특정 업종 밀집지구나 산업단지, 주로 자치구나 동 단위를 중심으로 일하는 비전속/비전형/불안정 노동자 등에 대해 지역 단위 노동복지 확충, 산업안전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함.
 - 다만, 현행 법체계 상 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정부가 민간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홍보·캠페인·계도·지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행정에 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방정부의 관련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함.
- 지역 단위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가야 함. 특히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노동자/종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대부분의 산업 육성·지원 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은 고려되지 않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마찬가지임. 오히려 산업육성정책에서 노동 관련 사항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인식되고, 이런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음.
 - 이는 오히려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귀결됨. 특히 작은사업장(소상공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유예 또는 박탈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영세한 상태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임. 이는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대립구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인 도심제조업의 경우 사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 유입과 숙련, 기술 전수 등을 어렵게 하고, 산업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소공인 정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노동환경 개선 정책은 사실상 전무함.
- 지역 공동 노동복지기금 조성, 노동공제회 등 다양한 노동자 조직 활성화 지원, 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체계 다층적 구축이 필요함.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 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주체는 단일 또는 복수의 사업자만으로 규정돼 있음. 원하청 공동 기금 조성 및 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노동자들을 포괄하기는 어려워 지방정부가 기금 조성

주체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또 노동공제회 등 노동자 자조 조직을 활성화하고 공제회·노동조합 등이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동조합이나 광역자치단체(서울시) 정책만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중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과 사업의 대폭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전반적인 노동정책 후퇴와 함께, 특히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임. 서울시의 관련 예산 삭감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3. 노동조합(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고민

○ 정책과제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로 고민되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함.

- 비전형·불안정 노동자, 작은사업장 노동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조 밖에 있음. 노동조합은 조합원(노조 안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합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하는 조직임. 초기업단위 교섭구조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 임단협을 기본적인 역할로 수행하고 있고, 이것만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 노동조합이 노조 밖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계급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와, 노조 밖 노동자들을 고려할 때 ‘당사자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음. 노동조합 간부/활동가들도 많은 경우 정책과제와 사업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할 주체와 역량은 취약하다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함.
-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음. 이는 노동정책과 관련법이 대부분 중앙정부와 국회 소관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약한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에서 사업장과 산별 노조의 임단협이 중심을 이루고, 지역 단위의 교류와 연대 수준이 낮아져있기도 함. 최근 몇 년간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확대해왔다는 면에서, 지역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음.
- 현 조건에서 노동조합만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노동문제를 다루는 지역주민단체들이 노조 밖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들도 도심제조업, 아파트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과 관련 정책 개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이런 조직들과 연대하고 공동사업을 확장하면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과 만나고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정책에 개입해가야 함.

○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단위 노사관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최근 플랫폼·플랜서 노동자들의 증가와 함께 정부·지자체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내고 있음(물론 충분치 않고 더욱 강화돼야 함). 하지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취약한 노동복지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의 주요 정책대상에서 빗겨나 있음.

- IMF 이후 민주노총이 많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시도하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뤄오는 동안에도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거의 진척시키지 못함.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해 해고가 자유롭고 사용자의 노동에 대한 통제가 인적관계와 결합돼 대체로 더 강하다는 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음.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사용자(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이로 인해 노조를 만들어도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오히려 사업장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조건이 전제돼 있음. 이는 사용자가 자발적·시혜적 노동복지 정책을 펼치는 ‘선한(?)’ 사용자인가와 별개로, 소상공인들도 우리 경제구조에서 약자이고 사업의 영세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별반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와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등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사용자인 소상공인에게 거의 전적으로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음. 이는 근기법 적용, 최저임금 등 주로 ‘최저 수준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반복되는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 ‘을’들의 싸움이라는 구도를 넘어서기 어려움. 작은사업장 노동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정책,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산업육성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나 소상공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

- 이런 노력은 개별기업단위의 노사관계를 넘어 전국 및 지역사회 수준의 정책 요구로 이어져야 함.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한 지역 단위의 노동복지 확충, 노동자 밀집지역에 대해 그 지역 전체를 하나의 큰 사업장으로 보고 지원하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조직화 등이 매우 중요.

○ 기후위기, 산업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의 측면에서도 사업장 단위의 노조활동을 넘어서지 않으면 대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음.

- 사업장 단위에서 고용보장을 달성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공공성,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구조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 많아지고 있음. 특히 탄

소다배출 기업과 산업의 노동자들은 해당 기업/산업에서 재교육/재훈련을 통해 업무전환을 이루거나 아예 다른 산업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여기에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함. 요구와 교섭, 투쟁, 노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방식이 사업장을 넘어 산업과 지역으로 나아가야 함.

토론문4

자영업의 위기와 일자리 사회안전망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문4

자영업의 위기와 일자리 사회안전망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개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소상공인법 상 용어)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120억원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이하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통계상 용어)
 - 고용원 있는 자영자 +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부가세[법상 용어])

□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 사업체 수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 (총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8%(329만개)이고, 전체 종사자수의 36.9%(662만명) → 사업체수 증가, 전체 사업체수 대비 비중 감소
 - 최근 10년간 소상공인 사업체수/비중 : (2010) 275만개/87.9% → (2019) 329만개/84.8%
- 업종분포
 -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은 87.9만개로 0.2%(1천개) 감소, 숙박·음식점업 1.8%(12천개) 및 제조업 0.7%(3천개) 증가

[표1] 소상공인 업종 분포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 산업	비중	도·소매업	비중	숙박음식점업	비중	제조업	비중	기타	비중
2018년	3,236,238	100.0	880,521	27.2	654,097	20.2	363,374	11.2	1,338,246	41.4
2019년	3,285,574	100.0	879,108	26.8	665,785	20.3	366,026	11.1	1,374,655	41.8
증감(률)	49,336(1.5)	-	-1,413(-0.2)	-0.4	11,688(1.8)	0.1	2,652(0.7)	-0.1	36,409(2.7)	0.4

○ 사업실적 (중기부·통계청 공동, '19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 연평균 매출은 235만원, 영업이익은 33백만원 (영업이익률, 14.0%)

○ 생존율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18년 활동기업 기준, (1년) 61.7%, (3년) 43.2%, (5년) 29.8%

[표2] 소상공인 창업 후 생존율 현황 (단위: %, 1인 기업)

기준	창업년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2014	2013	60.4	47.6	39.8	34.1	29.8
2015	2014	60.7	48.8	40.8	35.2	-
2016	2015	63.6	51.2	43.2	-	-
2017	2016	63.0	51.0	-	-	-
2018	2017	61.7	-	-	-	-

□ 비임금 근로자수 변화 추이

[표3] 비임금 근로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년도 / 분기	비임금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16	6,740	5,614	1,584	4,030	1,126
2017	6,791	5,682	1,608	4,074	1,110
2018	6,739	5,638	1,651	3,987	1,101
2019	6,683	5,606	1,538	4,068	1,077
2020. 1/4	6,474	5,494	1,436	4,058	980
2020. 2/4	6,658	5,578	1,378	4,200	1,080
2020. 3/4	6,637	5,553	1,347	4,206	1,085
2020. 4/4	6,521	5,498	1,328	4,170	1,023
2021. 1/4	6,300	5,388	1,300	4,088	912
2021. 2/4	6,630	5,571	1,307	4,264	1,059
2021. 3/4	6,607	5,547	1,286	4,261	1,059

□ 소상공인 자영업 폐업요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 사업자 실태조사 (2008년 12월, 소상공인진흥원)

- 장사가 잘 안 돼서 32.0% → 경기가 안 좋아서 13.6% → 사업장 이전 7.1% → 업종전환 5.1% → 예상보다 이익이 낮아서 4.2% 순

[표4] 2008년 소상공인 폐업 이유 (단위 : %)

구분	적성이 안맞음	장사가 안됨	이익이 낮음	성장 불투명	취업	경기 악화	자금조달곤란	개인사정	건강 악화	사업장 이전	업종 전환	기타
전체	3.4	32.0	4.2	3.0	0.6	13.6	3.6	3.7	3.9	7.1	5.1	19.9
20대	0.0	40.7	3.7	0.0	0.0	7.4	7.4	3.7	0.0	0.0	11.1	25.9
30대	3.4	32.8	4.2	3.1	0.8	13.6	3.6	5.0	4.1	5.5	4.5	19.3
40대	3.9	32.0	4.3	3.1	0.4	13.4	3.4	3.1	3.2	8.2	5.3	19.9
50대	2.3	30.5	4.6	2.7	1.0	14.2	3.8	3.6	5.2	6.9	5.8	19.4
60대이상	4.0	32.0	2.0	3.0	1.0	15.0	3.0	2.0	5.0	7.0	2.0	24.0

○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 (2014년 7월, 소상공인진흥공단)

- 폐업 이유(복수응답) : 예상보다 이익이 낮아서 69.3% → 수요가 없어서 38.2% → 성장가능성이 낮아서 28.1% → 건강악화 등 개인사정 14.8% 순
- * 장사가 안 돼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장 이전 등 보기누락

[표5] 2014년 자영업자 폐업 이유 (단위 : 건수, %)

구분	사례수	적성에 맞지않음	예상보다 낮은이익	성장가능성 낮음	수요없음	건강, 가정 등 개인사	업종전환	기타
전체	615	9.8	69.3	28.1	38.2	14.8	9.4	3.6
제조업	84	4.8	72.6	38.1	47.6	10.7	10.7	1.2
건설업	43	11.6	69.8	25.6	58.1	7.0	2.3	-
운수업	39	10.3	66.7	33.3	28.2	20.5	10.3	-
소매업	80	12.5	80.0	33.8	25.0	11.3	18.8	7.5
숙박음식업	70	17.1	65.7	20.0	24.3	18.6	10.0	11.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35	11.4	62.9	34.3	45.7	8.6	8.6	-
부동산중개업	41	12.2	56.1	31.7	39.0	7.3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1	3.2	80.6	35.5	41.9	12.9	16.1	-
사업시설관리	42	21.4	64.3	21.4	45.2	7.1	14.3	-
교육서비스업	41	-	68.3	17.1	39.0	24.4	4.9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5	11.4	71.4	17.1	42.9	2.9	5.7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4	2.7	66.2	24.3	36.5	33.8	5.4	9.5

○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2019년 5월, 중기중앙회)

- 폐업 전 영속기간 10년 미만이 84.0%로 절대 다수를 차지
- 1년 미만 6.6%, 1-3년 30.9%, 3-5년 21.0%, 5-10년 25.5%, 10년이상 16.0% 등
- 폐업 이유 : 과당경쟁, 경기침체 등 매출부진(60.9%) → 적성, 건강, 가족 돌봄, 워라벨 등 개인사유(16.8%) → 새로운 아이템 발견(4.6%) → 임대료, 건물주횡포 등 임대이슈(4.0%) → 인건비 부담(3.2%) → 과도한 세금(3.0%) → 행정처분 등 불가피 사유(1.6%) 순

[표6] 2019년 소상공인 폐업 이유 (단위 : 건수, %)

구분	사례수	과다경쟁 경기침체등 매출부진	적성건강 가족 등 개인사유	새로운 사업 아이템	임대료 등 사업장 임대 이슈	인건비 부담	과도한 세금	행정처분 등 불가피 사유	기타	
전체	501	60.9	16.8	4.6	4.0	3.2	3.0	1.6	6.0	
연령	30대이하	96	58.3	17.7	5.2	1.0	4.2	3.1	3.1	7.3
	40대	215	55.3	20.0	5.1	3.7	3.7	0.9	7.4	
	50대이상	190	68.4	12.6	3.7	5.8	2.1	2.1	1.6	3.7
폐업전 업종	제조업	52	65.4	9.6	1.9	3.8	1.9	3.8	3.8	9.6
	도소매업	114	64.0	12.3	2.6	6.1	2.6	2.6	1.8	7.9
	숙박음식업	134	61.9	14.6	4.5	3.7	8.2	2.2	0.7	3.7
	기타서비스업	201	57.2	22.4	6.5	3.0	0.5	3.5	1.5	5.5

□ 자영업 수익 악화

○ 자영업 수익 악화 요인

- ① 자영업 과밀화 : 일부 업종에 편중된 창업 - 외식업 (식당 / 카페), 편의점 등
- ②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 대형마트 / SSM / 복합쇼핑몰 등 문어발 식 확장
- ③ 프랜차이즈 급증과 더불어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등의 불공정 계약과 거래로 인한 수익성 악화
- ④ 상가임차료 부담과 분쟁

○ 코로나19 이후로 변화된 자영업 현황

- ① 방역 대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와 이용제한 등의 행정 조치
- ②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지형의 변화 :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이용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와 배달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대기업의 도매

거래의 중단으로 인한 유통 기능의 저하

- ③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고용인력 축소 및 단기 근로 고용 증가
- ④ 상가임대료 마련을 위한 부업 증가

□ 자영업 보호를 포함하는 근로기본권 보장

○ 일자리 안정망으로의 자영업

-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을 고용-피고용의 관계로만 접근하여 고용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수가 노동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노동의 강도가 상회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든 노동자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
- 또한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이용 사업자 등은 사실상의 갑에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갑-을 계약 관계에서 수익 조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고용주가 책임지지 않는 또 다른 노동계층의 형성으로 접근해야함
- 자영업자들은 스스로를 고용하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 청소년, 경력단절여성근로자, 고령층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안전망으로 작용해온 것이 인정되어야함

○ 노동권 보호에서 근로자의 소득 보호로의 확장

-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상황. 또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료’문제 역시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부담은 소득 저하의 원인이 아닌 소득저하의 결과이지만 소득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같은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반대급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지만,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와 시장 규제 및 개선은 늘 소외되어 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책이 등한시되는 현실
- 향후 노동과 임금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서 소상공인 소득 향상을 통한 지불능력 대책이 동반되어야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대립이 사라질 것

○ 자영업자 소득 보호 제안

- 지역화폐 지속적인 확장과 기본 소득 도입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영업 과밀화 해소
- 재벌 대기업의 규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법 / 대규모유통업법 등
- 대기업 규제를 통한 대기업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의 갈등 발생 요소의 해결 방안 모색 (카드 수수료 등)
- 상가임대차 대책 마련 (보증금 탈취, 적정 임대료 가이드 책정, 차임증감청구권 보장, 관리비 보호 등)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의 이항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
- 전국민고용보험을 전국민소득보험으로 개편하여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문5

사각지대 동네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제안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

토론문5

사각지대 동네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제안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I.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격차, 불평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더불어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노동의 의미는 선언적 인식이 확장되었을 뿐, 노동인권 보장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노조나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의 밖에 내팽겨쳐져 있으며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동네노동자들이며 서울시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동네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복지향상 과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동네노동자들이 요구가 있는 현장에 밀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생활밀착형(동단위)노동자 지원 활동시스템 구축과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동네 노동자들을 위한 강동구 민·관 활동 사례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3)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2021년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구 직영) 필수노동자 지원 활동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 추진개요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강구 :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강동구 필수노동자 업종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 필수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노동·심리상담 및 방역물품 등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2021. 3월 :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 5월~7월 :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및 완료
- 2021. 8월 : ‘강동구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종합계획’ 수립

3) 민간 노동시민단체(강동노동인권센터)의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① 우리동네 취약계층 노동자 (청소년·필수노동자 포함)들과 함께하는 노동인권·마음상담 지킴이 활동 구축 및 노동자배움터 운영사업 구축

○ 목적 :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동네 취약계층 노동자 (청소년 & 필수노동자 포함)들의 노동 불평등 해소를 노동인권·마음상담·배움터운영 및 인적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적인 동네노동자 노동권익을 증진한다.

○ 사업내용 :

- 1)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및 교육활동가 양성
- 2) 우리동네 마음지킴이 양성 실습과정 및 결과공유회

- 3) 우리동네 노동인권지킴이단 활동 구축
- 4)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동자배움터교실 운영

①-1. 세부활동사례- 강동지역 ‘우리동네 노동인권지킴이단’ 활동

○ 목적

-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동네 취약계층 노동자(청소년·필수노동자 포함)들의 요구를 직접 파악하고 현장에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노동·복지 연계를 할 수 있는 노동인권지킴이 활동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역 밀착형(동 단위) 노동인권 보호 활동 및 복지를 연계한다.

○ 내용

- 강동 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 및 3년이상 노동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노동인권지킴이 구성
- 우리동네노동인권지킴이단 활동방향 계획 및 평가
- 우리동네 노동인권지킴이 활동 (사각지대 배달 노동자 및 포커스 그룹 조사 및 홍보, 인터뷰, 노동복지 상담 연계)

○ 성과

- 동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 및 요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네 노동인권 인프라를 구축 함
- 동네 구석 구석까지 연결하는 <우리동네 노동인권지킴이단>을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동네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 활동 및 교육,간담회,홍보사업등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시스템을 구축하였음

①-2. 세부활동사례 - 사각지대 동네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동자배움터교실

○ 목적

-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동네 취약계층 노동자(청소년*필수노동자 포함)들이 가장 필요한 생활취미 강좌개설 및 노동자 민주시민교육 및 체험탐방을 진행한다.

○ 사업1 :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열린강좌

1. 춤으로 푸는 근 골격계 스트레칭
2. 미술로 그리는 평화
3. 내 몸을 지키는 건강인문학교실

○ 사업2 : 동네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체험중심 노동자 민주시민교육

- 1회 <민주시민교육이란?> 동네에서 만나는 노동자 시민교육
- 2회 <직접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소통> 직접민주주의로 주민자치 이해, 서로를 살리는 민주적 의사소통
- 3회 <노동 및 평등분야> 전태일 기념관 탐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4회 <민주주의 역사이해-한국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체험탐방 민주시민교육
- 5회 <인권*여성 및 소수자 인권> 여성사박물관 체험 등 체험중심 탐방교육
- 6회 <평화*통일분야> <임진각 또는 도라산>에서 1일 체험 탐방
- 7회 <환경분야> 기후위기 실천사례 탐방 체험교육
- 8회 <정치분야1-주택,의료,교육 등> 우리사회 현실을 이해하는 체험중심 교육
- 9회 <문화예술분야> 영화로 보는 우리사회 문화다양성
- 10회 동네 취약계층 노동자 증언대회-동네노동자 민주주의를 말하다

2)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강동연대회의> 지역연대 활동 구축

- 해마로푸드서비스 <맘스터치> 지원 연대활동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 강동구 공동주택아파트노동자 조직 및 교육 활동
- 고덕 그라시움 택배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촛불 등 필수노동자들의 현안에 맞는 지원활동 진행
- 강동구 라이더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우리동네 노동인권지킴이단 발족

3. 서울시 노동정책 제안

-동네 사각지대 노동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및 생활 속 (동단위) 노동자 지원체계 (서울시 25개구 ‘노동인권지킴이단’ 활동으로) -

동네에 살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해 각 구별 ‘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활동체계를 (지역별 민간단체*민주노총*서울시) 3자 협력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

더불어 서울시 25개구 ‘우리동네노동인권지킴이단’운영과 관련한 내용(‘노동인권지킴이 활동가 육성’활동내용’활동비 마련’등)을 합의하여 동네 노동현장과 생활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

구를 찾고 홍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빠르게 확산하여야 한다.
촘촘한 각 구별 네트워크를 통해 선언적 의미가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동네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4. 마무리

일하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현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달려가 파악하고 연대하는 지역 민간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열정과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활동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열정페이로는 일하기 어려운 ‘지역별 노동인권지킴이’를 <민·관·민주노총>이 협력하여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자. 동네 구석구석 생활 속에 방치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그 문제를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람(활동가)이다.

부록

서울시민 · 노동자 노동현안 및 정책 의견 조사 설문지

너머서울 노동+사회안전망 정책팀

서울시민·노동자 노동현안 및 정책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서울시 노동현안 및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 34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고 내용이 연구조사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 <너머서울 노동 + 사회안전망> 정책팀

2021년 11월

파트1 기초 통계 현황(인구학적 속성)

1-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1-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구 25. 중랑구

1-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여성 ② 남성 ③ 그 외의 성

1-4.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1-5.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해주시요. [1개 선택]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문항	저녁 심각하지않음	심각 하지않음	보통	심각 함	매우 심각함
8) 육아출산 및 돌봄 등 부족과 사각지대 문제	①	②	③	④	⑤
9)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	①	②	③	④	⑤
10) 일터에서의 노동자 권리 및 목소리 반영, 대변 부족 문제	①	②	③	④	⑤

3-2. 귀하는 아래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문항	매우 아니다	아 니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 렇 다
1) 모든 노동자는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연령·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노동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모든 노동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지켜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든 노동자는 적절한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모든 여성노동자는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모든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모든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는 아래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문항	매우 아니다	아 니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 렇 다
1)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 수준(현재 12.5%)은 더 높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매우 아니다	아 니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4)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쟁의행위 포함) 해당 관청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는 아래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문항	매우 아니다	아 니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초·중고 교과과정에 포함된 노동기본권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및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분배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는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귀하는 아래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문항	매우 아니다	아 니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서울시 조례와 정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①	②	③	④	⑤
2)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사회보험 및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파트4 **노동정책 평가, 방향**

4-1. 정부 부처(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자치구와 같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필요한 편 ⑤ 매우 필요함

4-2. 민선 7기 시기(2021 현재 오세훈 시장) 서울시 노동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전혀 잘하지 않았음 ② 별로 잘하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잘한 편 ⑤ 매우 잘함

4-3. 지난 민선 5기~ 7기 시기(2012년-2020년 박원순 시장) 서울시 노동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전혀 잘하지 않았음 ② 별로 잘하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잘한 편 ⑤ 매우 잘함

4-4. 서울시 추진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아래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정책 분야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서울시 청소·경비·시설·콜센터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①	②	③	④	⑤
2) 교통, 주거, 기초 생활을 위해 저임금노동자 대상 공공부문 생활 임금제도 시행	①	②	③	④	⑤
3)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홍보, 실태조사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 수립	①	②	③	④	⑤
4)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에 직원 대표 1-2인이 참여 하는 노동이사제도 운영	①	②	③	④	⑤
5)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동일 업무 수행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 차 확인을 위한 성별임금 공시제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서울지역의 광역/권역/구별 노동센터와 쉼터 설치·운영 통한 법률상담, 교육, 문화 등 지원과 실태조사	①	②	③	④	⑤
7) 서울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층 대상 유급 병가 지원(최대 14일) 제도	①	②	③	④	⑤
8) 서울시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층 대상 휴가 비 지원(최대 1박2일) 제도	①	②	③	④	⑤
9) 서울지역 다양한 취약 및 사각지대 정기적 실태조사(청소경비, 배달, 택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①	②	③	④	⑤
10) 서울지역 노동자, 사용자 등 다양한 노동교육 시행	①	②	③	④	⑤

정책 분야	매우부적절	다소부적절	보통	다소적절	매우적절
1.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 부서 설치와 운영 통한 행정 조직 기반 마련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서울시 노동, 여성, 청년, 돌봄 등 취약층 및 일하는 시민 대상 민간위탁 시설·센터의 확대 강화	①	②	③	④	⑤

4.5. 서울시 노동정책의 각 분야별 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1개 선택]

정책 분야	전혀중요하지 않음	별로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중요함	매우중요함
1. 저임금·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과 취약층의 노동기본권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아프면 쉬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유급병가·상병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의 사회보험 지원(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①	②	③	④	⑤
4. 저임금·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취약층의 노동복지 지원 위한 기금 설치·운영	①	②	③	④	⑤
5. 재난안전 및 감염병 시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산업안전 예방 등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맞는 고용노동정책 수립	①	②	③	④	⑤
8. 디지털 전환 및 고령화 사회 등 대비하기 위한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①	②	③	④	⑤
9. 지역 차원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조성 위한 고용정책 수립	①	②	③	④	⑤
10.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노동 전담 조직 운영과 정책 수립	①	②	③	④	⑤
11. 서울시 노동, 여성, 청년, 돌봄 등 취약층 및 일하는 시민 대상 민간위탁 시설·센터의 확대 강화	①	②	③	④	⑤

4.6. 서울시 노동정책의 각 분야별 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1개 선택]

정책 분야	전혀중요하지 않음	별로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중요함	매우중요함
1.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일과 삶이 조화된 일터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3. 고령노동자의 노후 대비와 퇴직 이후 건강한 일자리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등 일자리 제공과 노동기본권 보호	①	②	③	④	⑤
5.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인권이 보장된 환경	①	②	③	④	⑤

4-7. 마지막으로 서울지역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4-7-1. 서울지역 노동문제와 관련한 의견 :
4-7-2. 서울시, 자치구 구청과 관련한 의견 :

※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의 자료실>정책 게시판이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 ☞ <http://seoul.nodong.org>

▶ 구글 드라이브 ☞

https://drive.google.com/file/d/1G67nM_yKyJvBSCQ4b9FCRN9GY10qM0If/view?usp=drivesdk

